

중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

2026. 8. 27.

관계부처 합동

1. 추진배경

- 중기·과기·산업부 등 22개 부처에서 금융·기술·인력·경영 등 분야의 671개(내역), 31조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중('26)
- 유사·중복, 소액·나눠주기, 저성과·관행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정부의 예산·행정 낭비와 기업의 혼란(사업 공고 홍수 등) 발생

2. 효율화 방안

- ① (효율화 대상)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7개 부처, 472개, 25.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

* 중기부 중 사업(259개, 16.5조원) + 16개 부처(인프라·신규사업 등 제외, 213개, 9조원)

- ② (효율화 결과) 88개(△19%) 사업 통폐합·폐지, 144개(31%) 사업 감액 등 17개 부처 232개 사업(약 50%)을 효율화하여 4조원(△16%) 절감

- 유사·중복 사업 통폐합 : 사업 수 △19개, 예산 △2.4조원

* 해외전시회참여지원(중기·산업부), 환경·에너지기업 용자(기존환경부, 기존산업부) 등 부처간 부처내 중복 해소, 동일 업종 기업의 같은 목적 사업은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등

- 소액사업 통폐합 및 나눠주기 탈피 : 사업 수 △65개, 예산 △0.4조원

* 50억원 미만 소액사업 196개 중 통폐합 등으로 53개 감축(△27%), 1,309억원 절감
기업당 5,000만원 미만 나눠주기 사업 106개 중 12개 사업 폐지(△11%), 2,760억원 절감

- 저성과 사업 및 관행사업 퇴출 : 사업 수 △31개, 예산 △1.3조원

*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('23~'26) 결과 미흡 사업 효율화(△13개, △0.5조원)
목표 달성 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 정리(△18개, △0.8조원)

- ③ (재투자) 절감된 4조원의 중소기업 예산을 고성과 사업, 랜드마크 사업에 재투자*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'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'***으로 전환

* 부처협업·신안보·제약바이오·기후테크·K-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(3,103억원) 등

** 성장성·잠재력 확인체계 도입, 지역에 할당예산·지원한도·지원비율 상향 등

순서

I. 추진배경 1

II. 그간 추진 경과 2

III. 전부처 中企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3

1. 사업 수 감축 및 불필요 예산 절감 3

2. 절감된 예산의 전략적 재투자 5

3.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中企 지원체계 개편.. 7

I. 추진배경

□ 중기·산업·노동부 등 22개 부처에서 금융·기술·인력·경영 등 분야의 671개(내역), 31조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中('26)

○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소폭 감소, 예산은 소폭 증가

* ('24) 796개/28.7조원 → ('25) 722개/29.3조원 → ('26) 671개/31조원

<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('26)> (단위 : 억원, 개)

부처명	합계	금융	기술	인력	수출	내수	창업	경영
합계	309,515(671)	162,641(69)	65,040(279)	29,821(60)	8,846(65)	2,034(13)	14,178(47)	26,953(138)
중기부	133,600(141)	79,950(26)	21,913(28)	1,497(13)	2,894(11)	1,061(5)	11,887(20)	14,398(38)
금융위	36,598(7)	36,506(5)	-	-	-	-	29(1)	63(1)
산업부	34,956(130)	5,780(7)	25,204(86)	130(5)	2,956(15)	-	88(1)	798(16)
노동부	33,944(42)	5,409(3)	26(1)	27,428(31)	-	50(1)	300(1)	731(5)
기후부	26,031(72)	13,834(5)	7,423(36)	-	349(5)	-	219(1)	4,207(25)
문체부	14,284(35)	9,455(5)	478(5)	69(1)	70(1)	-	914(8)	3,299(15)
농식품부	11,889(60)	8,539(13)	1,204(18)	107(3)	1,442(13)	89(3)	271(5)	238(5)
과기부	8,519(96)	-	6,031(64)	553(5)	182(10)	-	311(5)	1,442(12)
그 외	9,694(88)	3,168(5)	2,761(41)	37(2)	953(10)	834(4)	159(5)	1,777(21)

□ 유사·중복, 소액·나뉘주기, 저성과·관행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정부의 예산·행정 낭비와 기업의 혼란(사업 공고 흡수 등) 발생

* (대통령 말씀) "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형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아서 빚어낼 필요가 있다"(3.20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등)

○ (유사·중복) 목적·대상·내용 등 같은 사업을 부처내·부처간 중복 운영

* (예) 중기부-산업부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, 기후부 환경·에너지기업 용자 지원(기존 환경부 사업과 산업부 이관 사업 중복) 등

○ (소액·나뉘주기) 50억원 미만 사업이 거의 절반 차지('26. 309개/671개), 기업당 5,000만원 미만 지원사업이 23.2%('25. 156개/617개)

*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선별 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까운 양상(한은, "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". '25.12)

○ (저성과·관행) 실집행 부진, 수혜기업 성장 미미 등 저성과 사업과 목적 달성,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관행적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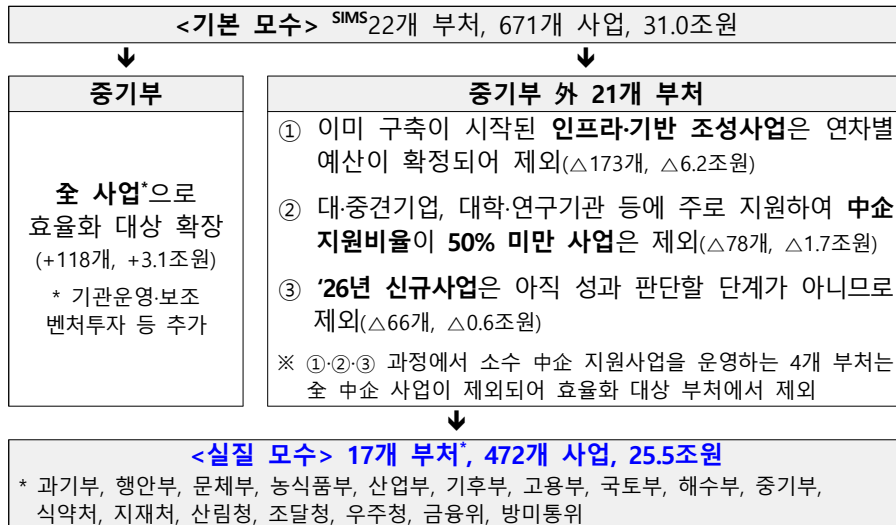
* '24~'25년 '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' 결과 '개선필요' 사업 34개 중 16개 (47%) 사업은 차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 발생

Ⅱ. 그간 추진 경과

① 효율화 대상 사업 설정(3월) : 17개 부처, 472개 사업, 25.5조원

-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소관 **소 사업**(259개, 16.5조원)을 효율화 모수로 설정하여 모든 사업 심층 분석
 - 중기부 외 21개 부처는 SIMS*에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, 인프라 사업 등 제외한 사업을 대상으로 효율화 추진
- * 중기부SIMS(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) : 소 중앙·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, 지원이력, 수혜기업 정보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

<효율화 대상사업 선정기준>



② 부처별 효율화 계획 수립·제출(4~5월)

- 부처별 대상사업 중 유사·중복 사업, 소액·나눠주기, 저성과·관행 사업 등을 발굴하여 통폐합, 감액 등 효율화 방안 마련(3~4월)
 - 17개 부처 합산 **예산 4조원(△16%) 절감 계획***을 수립하여 부처별 예산 요구안 제출(5월)
- * 중소기업정책심의회(5.22)를 통해 부처별 계획 수립 경과 점검

Ⅲ. 소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

1 사업 수 감축 및 불필요 예산 절감

◇ 17개 부처 232개 사업(약 50%) 효율화 : 88개(△19%) 사업 통폐합·폐지, 144개(31%) 사업 감액 → 4조원(△16%) 절감

① 유사·중복 사업 통폐합 : 사업 수 △19개, 예산 △2.4조원

- 부처내·부처간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인 사업들의 **중복 부분을 감액** 하고, 지원 목적·대상이 같은 사업은 **1개 사업으로 일원화**

<유사·중복 사업 효율화 사례>

- 중기부 여러 예비창업 사업*을 **'모두의창업 지원사업'**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비 등 예산 절감 (△764.3억원)
- * 도전 K-스타트업, 예비창업패키지, 창업중심대학, 기업가형소상공인 등
- 기후부 **미래환경산업육성(용자)** 사업과 산업부에서 이관된 **에너지절약시설설치(용자)** 사업의 중복(온실가스배출 저감 장치 도입 지원) 부분 감액(△819억원)
- 산업부 **수출경쟁력강화** 지원사업 중 중기·산업부 수출바우처 등과 중복인 해외 전시회 개별 참여 지원 예산 폐지(△73억원)

② 소액사업 통폐합 및 나눠주기 탈피 : 사업 수 △65개, 예산 △0.4조원

- 사업 통폐합 등으로 196개 50억원 미만 **소액사업**(0.4조원)을 143개로 53개 감축(△27%)하고 1,309억원(△31%) 절감
- 기업당 5,000만원 미만 **나눠주기 사업** 106개(6조원) 중 12개 사업을 폐지하고(△11%), 32개 사업을 감액하여 2,760억원(△5%) 절감

<소액·나눠주기 사업 효율화 사례>

- 기후부 소규모·분절적으로 운영되던 **'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(33억원)'**과 **'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(51억원)'** 통합
- 방미통위 **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** 관련 소액으로 나뉘어있던 ①제작 지원(10억원), ②컨설팅 지원(1.4억원), ③협업체 운영(3억원) 등 3개 사업을 1개로 통합

③ 저성과 사업 및 관행사업 퇴출 : 사업 수 △31개, 예산 △1.3조원

- 中企 지원사업 성과평가('23~'26) 결과가 미흡한 83개 사업(2.8조원) 중 13개 사업 폐지(△16%), 31개 사업 감액으로 4,819억원(△17%) 절감
- 목표 달성 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 정리 (18개 사업 폐지, 35개 사업 감액 → 8,452억원 절감)

<저성과·관행 사업 효율화 사례>

- 문체부 성과가 낮은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예산 1,244억원(△50%) 절감
 - * 실집행 부진('24년 71.0%, '25년 68.6%), '24~'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'개선필요' 등 성과가 부진
- 중기부 中企 정책자금 구조개편으로 고압력기업 중심의 지원예산 2,677억원을 절감(△15.8%)하여 혁신 창업기업에 집중

2 절감된 예산의 전략적 재투자

◇ 효율화로 절감된 4조원의 中企 지원 예산을 부처별 고성과 사업, 신규 랜드마크 사업 등에 재투자

- 부처협업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신규 추진
 - * (중기부) 2,388억원 + (국방부, 방사청, 복지부, 기후부, 문체부 등) 715억원
 - 新안보·제약바이오·기후테크·K-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여 사업화·금융·인력 등 묶음으로 최장 5년 지원
 - 신안보 국방부, 제약바이오 복지부, 기후테크 기후부, K-소비재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중기부가 기업 발굴부터 묶음·연계지원까지 쏠 과정 협력
- 중기부 중소 → 중견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고도화
 -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·오픈바우처·네트워킹·연계지원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('25~)의 고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

- 지원대상 매출을 기준으로 3단계(JUMP-UP 100 → 500 → 1,000)로 나누고, 단계별 우수성과기업은 이어달리기로 다음 단계 지원
 - * 도약 프로그램 예산 대규모 증액 : ('26) 595억원 → ('27) 1,642억원
JUMP-UP 100(288억원) + JUMP-UP 500(1,156억원) + JUMP-UP 1,000(198억원)

□ 농식품부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강화

- (기업 육성) 우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등에 원료 구매, 안전성·품질 관리, 물류 효율화,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쏠 과정 지원
 - *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업 증액 : ('26) 798억원 → ('27) 944억원
- (글로벌 진출) K-푸드 수출기업 대상 국제식품박람회 참가,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, 비관세장벽(EU PPWR 등) 해소 등 지원 강화
 - * 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사업 증액 : ('26) 380억원 → ('27) 543억원

□ 조달청 공공조달 활용 혁신 벤처·스타트업 판로 개척

- 조달청이 혁신 벤처·스타트업 판로 개척의 마중물이 되어 선도적으로 제품 구매, 수요기관이 시범사용 후 결과를 피드백하여 성과 환류
 - * 공공혁신조달사업(국내실증) 예산 증액 : ('26) 624억원 → ('27) 900억원
- 공공문제 해소에 기여할 기술개발(R&D) 지원 → 결과물 시범 구매 → 민수·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
 - *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(R&D) 예산 증액 : ('26) 80억원 → ('27) 102억원

□ 산업부 중소형 조선사 수주 지원 확대

- 중소형 조선사 선박 수주가 실제 건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* 특례보증 지원 확대
 - *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 증액 : ('26) 705억원 → ('27) 900억원
 - * RG(Refund Guarantee) : 조선사가 지급받은 선수금(건조대금의 40%)에 대해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환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환급 보증 요구

3 '성장촉진과 성과' 중심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

◇ 中企 지원 예산을 '효과가 높은 혁신기업'과 '지역 성장'에 집중

□ (심사체계 개편) 성장성·잠재력 확인체계 도입

- 中企 지원사업에서 기업 심사 시 먼저 '성장성·잠재력*'을 확인하여, 확인된 기업 중심으로 지원 → 中企 정책의 성장촉진 효과 제고
 - (성장성 보유 기준)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5% 이상(최근 3년 평균)
 - (성장잠재력 보유 기준) AI 기반 기업평가*(기보K-TOP, 코데이터KOGPS) 상위 30% 등급 이내
- * 재무·기술·인력·인프라 등 수십개 지표를 복합 분석하여 기업의 향후 성장률을 예측
- '27년부터 중기부 中企·창업·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점진적 확대

□ (지역 성장 촉진) 지역 중소기업을 수도권에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

- (지역할당) 中企 예산의 지역 투입 비중이 現 지역 中企 비중(47%) 보다 높아지도록 주요 사업별 지역 지원 비중 목표를 설정
- (지역우대) 비수도권을 인구감소, 균형방전,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3개로 그룹화(예성장·우대·특별지원)하고 국비 지원한도, 지원비율 등 우대